

## ‘지식공유연대’와 OA 운동

박숙자

### 1. 새로운 학문생산체제를 위한 지식공유연대

지난 8월 29일 40여 개 학회와 독립연구자들이 모여 ‘새로운 학문 생산 체제와 지식 공유’를 선언했다. 학교와 전공이 다른 연구자들이 이렇게 모인 것은 “경쟁과 성과주의에 물든” 연구 환경을 “공공적 가치”로 전환시켜 내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sup>1)</sup> 이를 위해 지식공유연대는 크게 두 가지에 집중했다. 첫 번째는 “지식 생산 및 활용의 공공적 가치 증진”을 위한 노력, 두 번째는 “학문과 지식 생산의 공공성·합리성”을 위한 노력이다. 전자가 학술지식의 활용에 관한 측면이라면, 후자의 것은 학술지식 생산과 관련된 것이다. 지식공유연대는 이번 선언에서 학술지식의 ‘생산’과 ‘활용(공유)’의 측면을 연결해서 하나의 ‘체제’로 사유하고자 했다.

학술 지식을 생산하는 연구(자) 문화와 연구 풍토가 점점 나빠지고 있다. 이는 ‘신자유주의 대학체제 하의 학문 장의 변형으로 요약할 수 있을 것이다. 연구(자)가 자기 동력을 가지지 못한 채 출세를 위한 자기 증명의 방식으로 지식 생산에 참여하는 동안, 국가기관인 <한국연구재단>은 연구비를 근거로 경쟁적인 논문 양산 체제를 반복하며 정량적 평가에 기반한 출세우기 평가로 연구 모임과 학회의 활기를 잠식시켰다. 뿐만 아니라 학술지식 생산의 기반을 조성하는 공공영역의 역할을 민간 디비가 대리하는 과정에서 학술지식의 공공성이 약화되었다.<sup>2)</sup> 실제로 인문사회 연구자들은 논문을 양산하는 연구 풍토 속에서 경쟁적으로 양산해낸 지식이 더 나은 삶을 위한 성찰로 쓰이기보다 입신 출세를 위한 자기 증명으로 사용되고 있다는 데 문제의식을 느끼고 있다.

뿐만 아니라 2016년 녹색당에서 ‘학술논문의 공공 접근권을 보장하라’는 논평이 나온 지 채 2년이 되지 않아 ‘국공립대학 구독료 협상이 결렬’이나 ‘국공립대학도서관 DBpia 보이콧 문제’ 등이 불거지고 있다. 학술지식의 공공성이 약화되면서 발생한 문제이다. 입신과 출세를 위한 연구풍토와 학술지식의 정보이용 권리가 갈등을 빚는 것은 서로 연결되어 있다. 이는 학술지식의 공공성 위기 속에서 야기된 갈등이자 학술 지식을 둘러싼 공유 구조와 수익 구조 간의 대립 속에서 빚어진 것이다. 지식공유연대는 이 총체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학술지식의 생산과 활용의 대안적 가치 모델을 기획하고 ‘새로운 학문 생산 체제’를 위한 가능성을 탐색해 보고자 한다.

1) <지식공유연대 선언문>, <https://knowledgecommoning.org>

2) ‘새로운 학문 생산 체제와 지식 공유를 위한 학술단체와 연구자 공동 심포지엄’에서 천정환, 배성인, 류준경의 발표 내용을 요약했다. 대학과 연구자의 연구 환경은 천정환의 「학회: 신자유주의 대학체제 하의 학문장의 변형」에서, 한국연구재단의 지원과 관리 문제점은 배성인의 「학문의 위기와 한국연구재단」에서, 그리고 민간 디비와 지식과 db 유통의 측면은 류준경의 논의를 참고했다.(이후 논의에서 8.29일 심포 발표를 인용할 때에는 ‘<8.29 지식공유연대 심포 자료집>’으로 약칭하겠다.)

## 2. 공공적 가치와 지식커먼즈

학술 지식은 이미 생산된 기존 지식의 기반 위에서 생산된 것으로 단독 연구라 하더라도 그 기본적인 속성은 ‘사회적 협동’의 결과이다. 뿐만 아니라 지식이 생산되는 과정에서 동료평가를 거치며 학문공동체 안에서 배양된다는 점 또한 학술 지식이 공공성을 띄게 되는 근본적 이유이다.<sup>3)</sup> 연구자들은 일 년에 한두 편의 논문을 쓸 때마다 20-50만원 정도의 출판 비용을 학회에 내지만, 논문 유통에 따르는 저작권료를 생각하지 않는다. 그 이유는 학술 지식이 가진 종래의 학술 지식에 기반해서 이루어지는 공공적인 것일 뿐만 아니라 사회적 가치에 이바지함으로써 소명을 다한다는 연구자 정체성 때문이다. 하지만 학술지식의 생산-활용이 두 개의 영역으로 분리되고, 이를 관리하는 국가와 자본의 영향력이 강력해지면서 학문의 장은 공공적 가치를 잃어가고 있다.

연구재단의 기준에 맞는 논문과 학술지만 업적으로 인정받게 됐고, 정부와 대기업 프로젝트의 수주로 연구자의 능력이 판가름나게 되었다. 정부와 언론은 평가를 통해 대학을 줄 세웠다. 자유로운 비판적 연구모임들은 제도권 학회로 변신했고, 대중을 향해 말을 걸던 독립 학술지들은 필자와 심사자만 보는 연구재단 등재지로 변신했다. 혹은 동의해서, 혹은 살아남으려고 상당수 ‘교수지식인’이 이 체제에 순응했다. 한때 한국에서 대학은 고고한 희망의 사다리였다. 거기 가서 엘리트가 되었다. 지금 대학은 누구나 가는 곳이 된 대신 공고한 서열과 세계 최고 수준의 등록금으로 민중에게 고통을 안기고 있다. 엘리트주의적 상아탑 모델이 답은 아니다. 나는 떠나는 쪽을 선택했다. 어쨌든 해를 요량이다. 남아서 치열하게 고민하는 분들도 어쨌든 해보셨으면 한다. ‘교수지식인’은 이미 민중에게 외면받고 있다.<sup>4)</sup>

기존 지식생산체제가 한계에 봉착했고 새로운 지식생산체제를 만드는 일에 교수·연구자들이 본격적으로 나서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기존 지식생산체제에서는 연구재단이 주도하는 신자유주의적 학술지식 생산, 양적 평가 중심, 지식의 사유화, 탈정치화된 지식 양산, 분과학문 중심주의, 학벌주의의 팽배, 영토화된 학문권력 등의 문제가 있었다. 요약하여 분과학문적 폐쇄성, 엘리트주의, 학벌주의로 인해 사회의 위기에도 불구하고 근본적으로 성찰을 던지는 지식을 생산하지 못했으며 현재에도 기능주의적 지식들만이 쏟아져 나오는 측면이 있다. 이러한 상황이 기존 지식생산체제의 위기, 지식인의 위기, 학문생태계의 위기를 초래하고 있다. 현재, 학술운동은 탐구에 대한 시민들의 자유라는 넓은 개념으로, 지식생산의 확장을 지향해야 한다. 대학 교수, 연구자뿐 아니라 탐구에 대한 자유가 보편적 기본권으로 인정될 필요가 있다.<sup>5)</sup>

2010년 ‘오늘 나는 대학을 그만둔다. 아니 거부한다’고 외쳤던 김예슬의 외침이 있던 지 채 10년이 지나지 않아 한 연구자가 ‘대학을 떠나겠다’고 말했다. 이 지적이 무엇보다 뼈아픈 것은 “교수지식인은 이미 민중에게 외면받고 있다.”라는 문장의 무게를 우리 연구자 스스로가 이미 느끼고 있기 때문이다. 연구자가 대학을 떠나는 이유는 “국가와 자본”의 관리 안에서 “자유로운 비판적 연구 모임들은 제도권 학회로 변신했고, 대중을 향해 말을 걸던 독립 학술지들은 필자와 심사자만 보는 연구재단 등재지로 변신”하면서 연구자의 정체성을 잃었다는 고백과 궤를 같이한다. 잃지 말아야 할 것을 잃었다는 자조는 “기존 지식생산체제가 한계에 봉착”했다는 비판과 직접적으로 연결된다. 현재 학문 장은 “신자유주의적 학술지식 생산, 양적

3) 박서현, 「한국 학계에서 지식커먼즈의 대안적 생산-공유의 과제」, <8.29 지식공유연대 심포 자료집>

4) 조형근, 「대학을 떠나며」, <한겨레신문>, 11.10.

5) 박배균, <8.29 지식공유연대 심포 토론문>

평가 중심, 지식의 사유화, 탈정치화된 지식 양산, 분과학문 중심주의, 학벌주의의 팽배, 영토화된 학문권력 등의 문제”로 요약될 수 있다.

‘지식공유연대’는 이 문제의 핵심에 공공성 위기가 놓여 있다고 판단하며, 몇 개의 사례를 통해 문제해결의 지점을 생각해 보고자 했다.

사례1) 시간강사법이 통과되면서 독립 연구자가 늘어났지만 대학 소속이 아닌 연구자가 논문 검색, 열람을 위해서는 어려움이 따른다. 통상 5000-8000원 하는 논문을 다운로드 받는 것이 부담스럽다. 논문 가격이 부담스러워 국회도서관을 찾아갔지만, 여기서도 논문 다운로드는 안 되고 프린트에도 비용이 든다. 국회도서관에는 직접 가야 볼 수 있는 디지털 원문이 많고, 원문을 출력할 때 비용을 내야 하는 경우 많다. 독립연구자가 된 이후에는 자기 논문조차 돈을 내고 다운로드 받아야 한다.

사례2) 학술지 평가를 앞둔 학회 운영진은 누가 이 일을 떠맡을 것인지 고민한다. 학회지 평가가 ‘인증’이라고 하지만, 이 평가에 학회 운영진은 사활을 걸고 ‘자체평가서’와 ‘정성평가 설명자료’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 또 ‘지식의 대중화’를 생각해서 학술대회를 1년에 4번 하는 것으로 기획했는데, 이것을 해내야 하는 것 역시 학회 운영자. 엄밀히 말해 ‘월화수목금금’으로 살아가는 전임교수의 ‘봉사’와 업계에서 강의 자리를 얻어야 하는 비정규직 교수, ‘그림자 노동’을 하는 대학원생이다.

사례3) 한달 전 학술지 지원 결과가 발표되었다 OOOOOO학회가 떨어진 사실을 확인하고, 한국연구재단 담당자에게 전화를 걸어 이유를 물어보니 “선생님 학회가 학술지를 3번 내셔서 점수가 부족했다”고 하면서 4번을 내시면 지원 가능성이 높아진다고 전했다. 학회지 지원 때문에 4번을 내야 하나 고민이다.

사례4) OOOO학회는 민간디비업체와 계약을 했는데, 홈페이지 관리 비용으로 일 년에 66만원을 받겠다고 통보했다. 몇 년 전에 홈페이지 서비스를 한다고 해서 무료로 이용해 왔는데, 이제 와서 홈페이지를 교체하려면 홈페이지 들어간 시간과 자료 관리가 고민된다. 이 민간디비 업체로부터 일년에 받는 저작권료 수입은 100-150만원 사이다. \*\*\*\*학회도 사정은 마찬가지다. 이 학회는 또다른 민간디비업체와 계약했는데, 저작권료로 150만원 이상을 받긴 하지만 초기 구축비용을 지원, 이를 알선한 투고시스템 업체에 매달 11만원씩, 연간 132만원을 지불한다. 학회가 콘텐츠를 지속적으로 제공하고 있지만, 얻는 수익은 없다.

사례5) 한국연구재단은 2019년 학술지 사업과 관련하여 “학술지 저작권 안내 시스템(Korea Journal Copyright Information, KJCI) 등록을 평가 신청자격 중 하나로 신설” 했다. “이는 국내 학회의 학술지 저작권 정책 수립 및 명문화를 지원함으로써 학술지 논문의 활용도를 상승시켜 오픈액세스(OA) 구현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하는 조치라고 공지했는데, 사례 4에서 보드시피 학회가 민간디비업체와 맺고 있는 저작권재산권 계약 수준과 괴리된 정책이다.

사례6) OOO구 도서관은 ‘전자저널 원문서비스’를 시행한다고 홈페이지에 공지했다. 도서관에서 제공하는 전자저널 DB가 ‘디비피아’였다. 안내문만 보자면 “전자저널=디비피아”로 오해하기 쉽게 디비피아가 알리고 있었다. 민간디비이지만 공공디비로 오해할 여지가 있었다. 대학도서관도 예외가 아니다. OOOO도서관 상단 ‘전자학술정보’ 배너에, DBpia, e-article, KISS(한국학술정보), 스콜라가 각각 게시되어 있어서 클릭하면 곧바로 사이트로 연결된다. RISS나 KCI 배너는 없다.

사례7) “논문을 통한 지식의 대중화를 기치로 디비피아가 3년 전부터 지속해온 사회공헌 사업으로

디비피아는 그동안 사회 이슈를 깊게 이해할 수 있는 우수 논문<sup>6)</sup>을 10편 선정, 원문을 무료 공개한다고 공지했다. ‘#대입제도, #공정성 #수시 #정시’ 키워드로 10편을 선정했는데, 선정의 근거가 제시되어 있지 않다. 표면적으로는 ‘사회공헌사업’일 수 있지만, 민간디비가 ‘우수’라는 기호로 학술지식을 줄세우는 것이며 학술생태계를 교란시키는 일이다.

사례 1)은 시간강사법이 가시화시킨 연구 환경의 단면이다. 최근 시간강사법이 통과되면서 대학에 적을 두지 않는 연구자가 많아졌다. 매 학기 시간 강의를 구해야 하는 시간강사나 초빙교수들은 계약기간 만료와 동시에 연구 환경에 대해 고민해야 한다. 연구 환경이 급격하게 나빠지고 있는 것이다. 학문 추구의 권리는 헌법에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이지만 권리 실현에 따르는 정보 접근은 연구자의 소속, 지위, 신분 따라 달라진다.

독립연구자가 되는 순간 전자저널을 열람하는 것이 쉽지 않다.<sup>7)</sup> RISS나 KCI를 확인해서 OA 논문을 확인하는 것은 최선의 방법이 될 수 없다. 논문을 쓰기 위해서 최근 연구 현황을 파악해야 하는데 협소한 학술 자료로 연구할 수 없기 때문이다. 학술 지식의 접근성이 떨어지게 되면 학술지식은 대학(소속기관)에 소속된 연구자들의 한정된 자본으로 독점될 가능성이 있다. 최근 디비피아에서 ‘연구지원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있는데 이런 지원은 선택적, 시혜적 기획으로 도모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학술지식의 공공적 가치 회복을 통해 마련되어야 한다.

뿐만 아니라 공공 도서관의 논문 이용조차 오픈 액세스 논문이 아니기 때문에 다운로드 받을 수 없다. 독립연구자만이 아니라 프리랜서, 탈학교 청년, 창업 준비자 등 다양한 경로로 학술지식을 접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많다. 대부분 질 좋은 정보를 얻으려고 하지만 대중들에게 익숙한 방식은 제한없이 정보를 접할 수 있는 유튜브와 포털이 일반적이다. 구글이나 네이버에 무료로 공개되는 OA 자료를 접근하는 것이 더 쉽고 간편하다. 대중들의 요구에 비해 학술 지식의 접근 문턱이 높은 것이다. 더욱이 학술지식을 수시로 탐색해서 연구논문의 현황을 살펴야 하는 독립연구자에게 이러한 연구 환경은 차별적이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대학도서관은 독립연구자를 포용하는 정책을 수립해야 하고 공공적 가치 실현을 위해 정보 이용 권리의 확대 정책을 기획해야 한다. 지식정보사회에 걸맞는 공정한 정보 이용 정책이 뒤따라야 하는 것이다.

사례 2)는 학회 운영 과정에서 빚어지는 부조리이다. 학술지를 지속적으로 생산하고 유지하는 과정에서 시간과 노동이 많이 들어간다. 이 영역에 ‘봉사’와 ‘그림자 노동’이 복잡하게 섞여 있다. 학회 운영에 학문후속 세대의 역할은 필수적이지만 이들은 사회적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서울대 대학원생 인권 실태 조사에서 ‘노동에 상응하는 적절한 보수를 받지 못했다’<sup>8)</sup>는 답변이 27.8퍼센트가 나왔으며 대학원생 노동조합의 구슬아 위원장은 “교과와 간사, 연구자로서 지식 생산과 대학 행정에 기여하고 있음에도 노동자의 직위를 인정받지 못하고 있던 대학원생들이 인권침해와 노동권 착취”<sup>9)</sup>가 일어나고 있다고 밝히고 있다. 학회 운영은 그림자 노동이 일어나는 부조리의 산실이다. “해외의 경우 학술 출판사가 저널을 생산하는 데 드는 비용을 부담한다. 한국은 교과의 무보수 노동, 그림자 노동에 의존한다.”<sup>10)</sup> 공익 추구 과정에서

6) 「디비피아, 입시제도 공정성 주제 논문 10편 원문 공개」, <경향신문>, 2019.11.11.

7) 독립연구자나 학술지식이 궁금한 시민들이 논문을 열람하기 위해서는 대개 포털 사이트에 무료 논문을 검색한다. 독립연구자나 크리에이터가 늘어나는 변화된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8) 「2016년 서울대학교 대학원생 인권 실태 및 교육환경조사보고서」, 서울대 인권센터, 2017.6.13.

9) 구슬아, 「8월 강사법 시행에 대학 꿈수, 대학원생 날벼락!」, 미디어 내일N, 2019.7.2.

나쁜 관행이 반복되는 것은 연구자의 악덕이나 학회 내부의 비민주적인 관행 때문만은 아니다. 오히려 학회가 학술지식의 생산과 출판을 전적으로 책임지는 과정에서 비롯된 부조리이다.

사례 3)은 학술지 평가를 둘러싸고 빚어진 참담한 풍경이다. ‘학술지 평가’ 제도를 통해 학술지가 표준화되고 제도화된 것은 분명해 보인다. “학술지의 기본적인 체계 및 질적 수준 유지”<sup>11)</sup>라는 기준이 어느 정도 달성된 것이다. 윤리 규정에 대한 기준 제시, 논문 심사 과정의 공정성을 기하기 위한 노력, 논문 게재나 편집위원의 편중성을 막기 위한 시도 등 등재지 제도 이전에 드러났던 여러 구습 등이 해결된 것 역시 분명한 성과이다. 그러나 어느 누구도 현재의 학술지 평가가 ‘좋은’ 학술지를 만들어내는 기준을 제시한다고 말하지 않는다. 인문사회과학의 후속 세대가 줄어들고 있고, 대학 별로 대학원생 배출이 어렵다고 말해지는 상황에서 학술지의 평가 기준은 ‘논문 숫자’에 집중되어 있다. 일 년에 4번 이상 발간해야 3점을 얻을 수 있고, 일정하게 탈락논문이 있어야 논문게재율을 맞출 수 있는 것이다. 경쟁적으로 논문을 양산하는 체제를 가치 모델로 삼는 것은 적절해 보이지 않는다.<sup>12)</sup> 학회지 평가와 지원을 위한 새로운 가치 모델이 필요하다.

구분	심사 내용(배점 기준 포함)	배점																
등급 차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신청마감일 기준, 학술지의 우수등재/등재 여부에 따라 차등 지원</li> <li>- 우수등재학술지에만 점수 배정</li> </ul>	8점																
발행 횟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2019년도 발행(예정포함) 횟수(발행규정 기준 : 정규 발행호만 인정)에 따라 점수 부여</li> </ul> <table border="1"> <thead> <tr> <th>배점</th> <th>1점</th> <th>2점</th> <th>3점</th> <th>4점</th> <th>5점</th> </tr> </thead> <tbody> <tr> <td>구간</td> <td>1회</td> <td>2회</td> <td>3회</td> <td>4~5회</td> <td>6회 이상</td> </tr> </tbody> </table>	배점	1점	2점	3점	4점	5점	구간	1회	2회	3회	4~5회	6회 이상	5점				
	배점	1점	2점	3점	4점	5점												
구간	1회	2회	3회	4~5회	6회 이상													
※ KCI에 등록된 정보를 기준으로 함(선정 후 허위 기재 발각 시 전액 환수)																		
논문 편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2018년도 연간 게재 논문 총 편수(실적기준)에 따라 점수 부여</li> </ul> <table border="1"> <thead> <tr> <th>배점</th> <th>0점</th> <th>1점</th> <th>2점</th> <th>3점</th> <th>4점</th> <th>5점</th> <th>6점</th> </tr> </thead> <tbody> <tr> <td>구간</td> <td>10편 이하</td> <td>11~20편</td> <td>21~30편</td> <td>31~45편</td> <td>46~70편</td> <td>71~100편</td> <td>101편 이상</td> </tr> </tbody> </table>	배점	0점	1점	2점	3점	4점	5점	6점	구간	10편 이하	11~20편	21~30편	31~45편	46~70편	71~100편	101편 이상	6점
	배점	0점	1점	2점	3점	4점	5점	6점										
구간	10편 이하	11~20편	21~30편	31~45편	46~70편	71~100편	101편 이상											
※ KCI에 등록된 정규호 발행의 정규논문 편수를 기준으로 함(선정 후 허위 기재 발각 시 전액 환수)																		
온라인 접근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Open/Free Access인지 여부에 따라 점수 부여</li> <li>- KCI 혹은 홈페이지 등에서 Open Access/Free Access인 경우 6점</li> <li>- 학술단체 홈페이지 및 기타 관련 사이트 등에서 유료 공개인 경우 2점</li> <li>- 미공개인 경우 0점</li> </ul>	6점																

사례 4)는 학회와 민간 디비업체 간의 불균형한 관계의 단면이다. 두 계약 주체 간의 계약 내용에 따라 학술 지식의 공공성 가치는 상승되기도 하고 하강하기도 할 것이다. 현재 민간 디비업체가 국가 기관을 대리, 보충하면서 학술지식을 독점적, 배타적으로 관리하고 있다. 민간 디비의 활용이나 구성만 보면 원저작자가 제공한 데이터에 전적으로 기반해 있다. 그럼에도 “다른 사람이 구축한 자산에서 이득을 취하면서도 원래 창작자들에게 그 이득을 조금도 떼어 주지 않는다”<sup>13)</sup>는 플랫폼 경제의 특성을 반영하고 있다. 원저작자의 학술지식에 기생하는 서

10) 이재윤, <8.29 지식공유연대 토론문>  
 11) <2019년도 학술지지원사업 신청요강(안) 기준>, 한국연구재단. 2019.  
 12) 천정환, 「본말 전도된 학진 평가..’논문 아닌 학문’을 허하라, <한겨레신문>, 2010.3.3.

비스임에도 원저작자나 학회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2012년도 계약에는 학회가 ‘공공목적’으로 학술지 서비스할 수 있도록 하였음. 2019년도 계약은 이 사항이 포함되어 있지 않거나 모호함. 공공목적으로 학술지 서비스한다는 것은 KERIS의 RISS, KISTI의 NDSL, 연구재단의 KCI에서 원문을 공개할 수 있는 것임. 다양한 채널을 통하여 학술지를 공개하면 논문이용이 확대될 수 있음. 특히 KCI에 논문을 제출하는 것만으로 원문이 공개되는 것은 아님. KCI에서 원문을 공개하려면 누리미디어와의 계약에 공공목적으로 학술지 서비스할 수 있도록 명시해야 함.[...] 2019년도 계약에 따르면 논문의 저자가 자신의 논문을 자신의 홈페이지에도 올릴 수 없음. 전송권을 누리미디어에 양도했기 때문임. 2012년도 계약에서는 원저자의 저작물 활용도 허용하고 있음. (2019년 계약서 법률 자문 결과)

최근 디비피아에서 제시한 계약조건은 이같은 우려를 그대로 드러내고 있다. 2019년 디비피아가 제시한 계약서를 가지고 법률 자문 받은 결과이다. 2012년 계약과 2019년 계약의 내용을 비교해보면, 지적재산권의 ‘양도’에 대한 법률적 인식을 명확하게 드러내고 있으며 원본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2차 콘텐츠로 제작할 가능성까지 포함시키고 있다. 저작재산권 계약서의 제목조차 ‘콘텐츠 개발 및 저작권 계약서’이다. 학술 지식 활용의 범위를 보다 구체적으로 특정할 필요가 있다.

뿐만 아니라 2012년 계약서에서는 “갑의 공공목적 또는 자체적인 회원유치나 기존 회원에 관련된 콘텐츠 서비스 정책에 대해서는 본 계약과 무관하게 ‘갑’ 자체의 판단으로 진행할 수 있다”는 내용이 2019년 계약서에서는 “학회의 학회홈페이지와 학술지 홈페이지 운영을 위해 필요한 경우 학회의 자체 판단으로 저작물을 서비스할 수 있다”는 내용으로 바뀌어 있다. 2019년 계약서 안은 원저작자의 셀프 아카이빙조차 불법으로 간주할 가능성이 있다. 민간 디비의 권한이 독점적 권한이 강화된 것이다. 계약기간 동안 ‘학회 홈페이지 운영’ 정도만을 허용하면서 ‘공공목적’ 활용 조항을 아예 삭제했기 때문이다. 이는 학술 지식이 본래적으로 가지고 있는 ‘사회적 기여’와 ‘공공성’을 지워내는 조치이다. 이런 계약 조항은 향후 학술지 지식의 방향을 좌우할 것이다. 이는 불법적이지는 않지만 윤리적이지도 않다. 학술지 지식의 공공성 보전을 위해 학회와 민간 디비 업체 간의 계약에 있어 공공적 가치를 강화할 수 있는 저작재산권 인식의 강화가 필요하다.

사례 5) ‘학술지 저작권 안내 시스템’은 분명 필요한 정책이다. 그런데 이 ‘좋은’ 정책이 어떻게 구현되어야 하는지 그 절차와 방법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다. 이를 위해서는 학회와 저자 모두 저작재산권의 계약내용을 정확하게 이해해야 한다.

게재 논문의 ‘저작재산권’ 양도는 OOOO학회가 본 학회의 홈페이지 및 전문업체 계약을 통하여 PDF 파일로 제작한 既 게재논문을 유, 무상으로 서비스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단, **게재논문의 ‘저작재산권’ 양도에 동의하더라도, 논문의 ‘원저작재산권’은 필자에게 있으므로 필자가 원하는 바에 따라 다른 간행물에 자유롭게 게재할 수 있습니다...** ‘게재논문’의 ‘저작재산권’은 <OOOO> **게재논문의 지적 활용도를 더 높이기 위한 것입니다. 본 회에서 게재논문에 대한 열람 서비스를 광범위하게 제공하는 목적도** 이러한 데에 있습니다. 따라서 필자의 개인별 논문을 상업적 목적으로 이용하고자 하는 것이 아님을 해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OOO학회 저작재산권 양도 공지문>

13) 스콧 갤러웨이, 『플랫폼 제국의 미래』, 비즈니스 북스, 2018. p.243.

위 인용문은 한 학회의 공지문이다. 게재논문의 경우 ‘저작권’을 ‘양도’해야 된다는 것, 그리고 이 ‘양도’는 원저작자의 출판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 아니며 동시에 학회에 게재논문의 저작권의 일부를 양도한 것은 ‘지적활용도를 높이며’ ‘열람서비스를 광범위하게 제공하는 목적’이라고 분명히 표시하고 있다. 이 공지문은 다른 학회들에 비해 정확한 용어 사용과 자세한 안내를 한다는 점에서 비교적 좋은 선례에 속한다. ‘저작권’으로 저작권의 권리를 정리해내고 있는 것은 물론 ‘원저작재산권’의 몫을 분별해내고 있다는 점, 그리고 이런 계약의 취지가 “지적활용도”와 광범위한 “열람서비스”라는 점 또한 분명히 밝히고 있기 때문이다. 대부분의 학회는 ‘민간 디비’ 업체와 계약을 맺을 때 ‘저작권’ 계약이라는 말을 정확하게 사용하지 않는다. 그런데 이 친절한 공지문 역시 분명하게 명시하지 않은 사실이 있다. “원저작재산권은 필자에게 있으므로 필자가 원하는 바에 따라 다른 간행물에 게재할 수 있다”고 쓰여 있어서 저작권의 ‘이용허락’이라고 오해할 여지가 있지만, 공지문 서두에 제시하고 있는 것처럼 ‘양도’한 것이므로 원저작자가 디지털 자료를 셀프아카이빙 할 수 있는지 불분명하다.

원저작자가 자기 논문을 ‘간행’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는 있지만, 디지털 자료를 본인의 SNS 등에 올리는 셀프 아카이빙의 문제에 대해서는 밝히고 있지 않은 것이다. 만약 이 계약 제도가 ‘공지문’에서 밝히고 있는 것처럼 ‘지적활용도’를 높이기 위한 것이라면, 셀프 아카이빙이나 공공기관 OA 논문 제공 등에 대해 동시에 분명하게 명기되어야 한다. 향후 각 학회에서 민간디비와 계약할 때 ‘원저작자’의 권한과 권리에 대한 인식을 높여서 계약해야 한다.

실제로 외국의 경우 각 학회는 원저작자의 권한에 대해 분명히 제시한다. 학회가 민간 디비와 맺고 있는 계약 내용을 공지하고 이를 토대로 논문을 제출 받는다. 때문에 학회는 계약 내용을 정확하게 숙지한 다음 민간디비와 계약을 맺어야 한다. 다시 말해, 원저작자는 자기 권리에 대한 인식을 분명히 정립해야 하고, 학회는 원저작자의 저작권의 일부를 양도받은 계약주체로서 계약 내용을 정확하게 인식해서 합리적인 학회 운영에 나서야 한다.

사례 6)은 학술지식을 누가 어떻게 관리, 지배하는지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례이다.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공공도서관은 데이터 자원을 매개하는 플랫폼의 역할을 한다. 공공도서관은 모든 데이터를 소장할 필요가 없다. 공공 도서관의 역할은 공공 영역의 네트워크 자원을 통해 데이터 접근을 가능하게 하는 일에 집중해야 한다. 이런 관점에서 보면, 공공 도서관의 전자저널 이용권은 디비피아와 계약했는지라도 도서관에서 소개해야 하는 것은 다양한 콘텐츠 자원을 검색할 수 있는 RISS, NDSL를 안내하는 것이 적절하다. RISS를 통하는 방법이 더 많은 논문을 손쉽게 볼 수 있는 방법이다. 그럼에도 “전자저널=디비피아” 공식을 공공도서관에서 가시화시키는 것은 섬세하지 않은 조치이다. 이런 사정은 몇몇 공공 도서관만의 문제가 아니다. 0000대학도서관은 도서관 사이트 전면에 ‘전자학술정보’ 배너를 게시해 놓고 있다. 이 대학 도서관이 실제 계약을 맺고 있는 민간디비업체를 그대로 ‘광고’하는 셈인데, 이 ‘친절한’ 배너는 디지털 자원을 ‘사서 쓴다’는 사유화 개념을 무의식적으로 체화시키는 시스템이다. 학술지식이 공유자원일 수 있다는 가정이 고려되지 않은 것이다.<sup>14)</sup> 대중들의 인식 변화를 위한

14) 정경희의 발표에 따르면, 이런 인식은 민간 디비업체가 소유한 학술논문의 수와 비례하지 않는다. 디비피아에서 제공되는 등재지수가 전체 등재지수가 33%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민간디비 업체가 보유한 학술지 수와 연구자들이 자주 사용하는 유통 채널 간의 인식이 비례하지는 않는 것이다. 이는 민간디비업체에 비해 KCI가 유통시키는 학술지 수가 많아도, 전자저널 유통 초기에 민간디비업체가 망라성에 의거, 많은 수의 학술지를 집적하면서 인지도가 높아진 것이다.(정경희, 「학술지 유통 현황과 이슈」, 『한국문헌정보학회』 학술발표자료집, 2018.4)

공공 영역의 노력이 필요해 보인다.

사례 7)은 디비피아가 ‘사회공헌사업’으로 ‘우수논문 10편’을 선정해서 무료 공개하는 것과 관련돼 있다.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려는 기획임에도 약간의 문제점이 있다. 우선 어떤 근거로 ‘우수 논문’을 선정했는지 그 근거가 모호하다. 공지문에 나와 있는 근거만 참고하면 “#대입제도 #공정성 #수시 #정시” 4개의 키워드를 입력값으로 넣었을 때 조회수에 근거한 결과가 아닐까 추정해 볼 수 있다. 4개의 키워드를 입력하면 검색 결과가 총 42건이 뜨는데, 이 중에서 이용수가 높은 10편의 논문의 결과가 ‘우수 논문’으로 홍보되었을 것이라는 짐작은 사실과 다르다.<sup>15)</sup>

이는 향후 민간 디비의 ‘서비스’ 과정에서 테이터를 선별, 배제하며 ‘우수 논문’의 상징 기호를 부여하는 권한 남용의 서비스/지배의 과정으로 변질될 수 있다. 민간디비 업체가 ‘무료’ 공개를 통해 학술지식의 공공성에 참여하는 결정은 기업의 사회적 책임과 관련된 일이지만, 실은 데이터에 상징 기호를 덧붙여 상품의 차별성에 직접 개입하는 상업적 논리이다. 짐작컨대 향후 민간 디비업체는 시장 원리에 충실하게 테이터를 차별적으로 생산하려고 할 것이다. 디비피아의 ‘논문 무료 공개’에 따라 개인 회원의 유입 효과가 발생할 것이며, 이는 향후 다른 논문을 구매할 수 있는 직간접적 동기가 될 것이다. 이것 역시 기업이 자기 논리로 시장에 참여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비난할 수만은 없다. 오히려 문제는 학술 장의 질서를 견인할 주체가 없다는 점이다. 민간 디비 업체가 자기 논리로 ‘우수 논문’을 상업화하면서 학술생태계를 교란시키는 과정에서 이를 방어하거나 저지할 주체가 이미 ‘저작권재산권 양도’를 한 채 무기력하게 개별화된 상태라는 점이다.

위의 사례들은 “공공적 가치의 약화와 퇴조”의 징후이다. 위의 사례를 보면서 공공 영역이나 민간 디비의 문제를 비판하며 해결책을 궁리해 볼 수도 있겠으나 이는 문제의 해결이 아니라 반복일 수 있다. 일단, “자유로운 비판적 연구모임들은 제도권 학회로 변신했고, 대중을 향해 말을 걸던 독립 학술지들은 필자와 심사자만 보는 연구재단 등재지로 변신했다”<sup>16)</sup>는 평가를 다시 생각해 본다면, <한국연구재단>을 비롯한 공공영역이 무엇을 더 하는 방식이 아니라 오히려 이들 (국가, 공공) 기관이 무엇을 할 수 ‘없’는지 묻는 일이 시급해 보인다. 지금 필요한 것은 “국가가 공공성을 담보할 유일한 주체”가 아니라는 판단이다.<sup>17)</sup>

국가 기관의 지배와 관리 속에서도 ‘자유로운 비판적 연구’를 해내는 학술지식 장은 제도의 힘으로 포섭할 수 있는 장이 아니다. 마찬가지로 민간 디비가 학술생태계의 질서를 어지럽힐 때 이를 방어할 수 있는 것은 학술지식 장의 주체인 연구자들이다. 지금 필요한 것은 학술 지식이 바로 ‘공유자산’이라는 인식과 동시에 이 공유자산 안에 내재한 ‘공공적 가치’를 관리, 순환시킬 수 있는 연구자들의 자발적인 의지이다. 이 힘을 지원하고 지지하는 일이 필요할 뿐이다.

15) 이는 신문기사가 뜬 2019년 11월 11일 저녁 8시 기준이다. 공개된 논문의 이용수는 급격하게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지식누림>의 다른 서비스는 같은 조건으로 분석해 볼 수 없었다. 원문 무료 결정에 따라 <우수논문>의 이용수가 사후적으로 반영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16) 조형근, 앞의글.

17) 하승우, 『공공성』, 책세상, 2014. p.17



### 3. 패러다임 전환을 위한 제언: OA와 지식 커먼즈

지식공유연대는 <새로운 학문 생산 체제와 지식 공유를 위한 학술단체 및 연구자 연대 선언>을 하면서 “오늘 우리는 학술성과의 유통에 관한 공공기관과 민간업체의 정책을 개선하고, 학회 및 학술지 운영에 관련된 연구자 문화를 성찰하여 스스로 바꾸기 위해” 모였다고 선언했다. 이 문제의식의 근간에 놓인 공공성의 가치 약화는 학술지식의 생산과 활용 전반에 깔려 있으며 더 이상 외면할 수 없을 정도로 갈등과 분쟁, 무기력과 비윤리성의 문제까지 안고 있다. ‘지식공유연대’는 이 문제를 생산적인 논의와 협력적인 파트너십으로 해결하고자 한다.

#### 1) 지식 생산자들이 참여하는 지식 커먼즈 플랫폼: 운동으로서의 OA

지식공유연대는 지난 5월부터 매 달 모임을 가지고 있다. 현재 40개 정도의 학회와 연구자 단체가 참여하고 있으며, 내년 2월 창립 총회를 개최하게 되면 참여 단체의 규모는 더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반년 간의 회의를 통해 확인된 모임의 성격은 연구자의 자발적이고 주체적인 참여를 도모하면서 OA 출판을 의식적으로 지지하는 연대체이다. 그리고 지난 6월 모임에서 합의한 것은 “지식 생산자인 연구자들이 자유롭게 사이트에 접근하고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 것을 제안하자”<sup>18)</sup>는 요구이다.

- ☞ 학문 분야별 학회 연합 플랫폼: 지식 커먼즈의 토대, 연구자들 간 협력과 소통
- ☞ OA 출판 학술지의 통합적 운영 플랫폼: OA 논문의 대중적 접근 확대
- ☞ 국어국문학, 한국학 인접 학회 OA 선언 예정

학회들 간의 연대와 협동을 통해 연구자 스스로의 문화를 혁신시켜 나가기 위한 시도로서 ‘분야별 학회 연합’ 역시 생각하고 있다. 이는 폐쇄적인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학회들 간의 경쟁을 지양하고 협력의 방식으로 학문 담론장의 활력과 생기를 불어넣으려는 시도이다. 또한 지식 생산의 과정에 개방적인 참여와 협력적인 소통을 촉발시키는 호혜주의적 연결에 기대는 방식이다. 이는 그간 학술지식 장에서 사라진 공공적 가치를 되살리고자 하는 노력이기도 하다.

뿐만 아니라 학회별 연대를 집합적으로 기획하는 과정에서 OA 논문의 사회적 기여 또한 현실화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 현재 각 학회가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있는 논문은 소장과 집적의 기능이 강하지만 논문검색이나 열람의 기능은 떨어지는 편이다.<sup>19)</sup> 여러 학회가 사이트를 공유, 통합해서 운영하게 되면 OA 논문의 접근성이 훨씬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물론 이를 위해 분야별 관련, 인접 학회가 동의하고 협력하는 것이 필요하고, 이들이 공유할 수 있는 플랫폼 개발이 필요하다. 일단 내년 2월에 있을 지식공유연대 창립 총회에서 국어국문학, 한국학 인접 학회 10여개가 OA 선언을 할 예정이다.

OA 출판으로 전환한다고 해서 이것이 곧 지식커먼즈가 되는 것은 아니다. 학술담론을 생산하고 관리하는 커먼즈 과정이 필수적이다.<sup>20)</sup> 이를 위해 학문별 모임을 기획하면서 개방적이고

18) <지식공유연대> 6월 회의록.

19) OAK 사이트는 집적, 소장 중심의 사이트다.<http://www.oak.go.kr>

협력적인 참여의 과정을 현실화하고자 한다. 논문을 검색, 열람하며 연구의 결실을 만들어 가는 과정에서 동일 분야 연구자 간의 소통과 협력은 '지식커먼즈'의 실제적 토대가 될 수 있을 것이다. 학문 분야별 모임으로 촉발되는 지식커먼즈 플랫폼은 일차적으로는 OA 논문을 게시하고 검색할 수 있는 기능이 주요할 것이다. 아울러 분야별 편집(출판)인 협동조합이 가시화되면 그림자 노동을 근로계약에 기초한 노동으로 전환시켜 내는 것도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중이다.

이를 위해서 학회연합을 위한 플랫폼 개발 지원이 필수적이다. 이 플랫폼의 기본적 성격은 지식 생산 과정에서 필요한 '참조'와 '평가'의 가치를 높이면서 학술지식의 공공성을 찾아가는 시스템을 기본으로 한다. 가칭 '학회 연합 OA 플랫폼'은 학술지식의 공공 영역과 민간디비로 나뉘어진 영역을 상호보완하는 형태로 학술지식장을 순환시키는 공공적 가치 모델의 참조점이 될 것이다. "지속가능하고 안전한 플랫폼"으로 소개되는 인문학 OA 출판 사이트인 <Open Library of Humanities>도 참조해 볼 수 있다.<sup>21)</sup> 또, 이를 기술적으로 접근하는 과정에서 오픈액세스 기반의 전주기 출판 시스템 개발된다면 큰 도움이 될 것이다.

'지식 커먼즈'라는 공유지 모델을 만들어가는 과정에서, 학회 못지 않게 연구자 개인의 자발적 동기를 만들어가는 과정도 필수적이다.<sup>22)</sup> 셀프 아카이빙이 그런 근거를 만들어내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 이를 위해 지식커먼즈를 움직이는 힘으로 호혜주의에 근거한 개인 간의 자원 공유 역시 고려해 볼 수 있다. 학회 연대 모임이 만들어져도 그 안에서 각각의 연구자의 내적 동기를 만들기 위한 노력이 필요한데, 사회적 논리에 입각해서 데이터 자원을 공유하는 P2P 교환은 이를 촉진시켜낼 것이다. 이를 위해 민간디비와 계약할 때 셀프 아카이빙 조항을 분명히 기입해야 한다. 이는 원저작자의 권리이다. 일례로 SHERPA/RoMEO<sup>23)</sup>에서는 OA 아카이빙을 위한 여러 지원과 안내가 자세히 소개하는 일종의 프로젝트이다. 이 사이트에서는 학술지별로 출판사와 저작권 정보 등을 제공한다.

## 2) 공공적 가치 모델의 창안과 데이터 거버넌스: 제도로서의 OA

지식정보 사회로 진입하고 있는 우리 사회에 필요한 논의는 데이터를 누가 어떻게 관리할

20) 홍기빈, <8.29 지식공유연대 토론회> "커먼즈의 경우 성원들이 의식적 규약을 통해서 자원을 함께 생산하고 관리하고 공유하는 것이 필요하며 커먼즈는 오직 이럴 때 존재할 수 있다. 즉 능동적 관리 혹은 커머닝의 과정이 중요하다. 커먼즈를 만들기 위해서 커머닝의 정신·가치·의미를 얘기해야 될 필요가 있는 것은 이 때문이다."

21) <https://www.openlibhums.org>

22) 연구자의 개방적인 협력을 위해 학술지식 활동을 좀더 호혜적인 방식으로 구성해내야 한다. 이를테면 현재 연구자들은 논문 게재 이후 모든 계약을 학회에 위임한 채 학술생산 활동을 종료한다. 본인의 데이터 자원을 가지고 데이터 활동을 하지 않는다. 다른 연구자의 논문을 인용, 참조하기는 하지만 이또한 본인의 논문 안에서만 이루어진다. 지식커먼즈를 지향하는 의식적인 노력이 개발되지도 않고 독려되지도 않는다. OA 제도만으로는 지식커먼즈 활동이 자리잡기 어렵다. 분야별 학회 연대 모임 안에서 상호 호혜적인 활동이 생산되어야 한다.

23) 위키백과 "노팅엄 대학의 SHERPA 서비스. RoMEO는 오픈 아카이브를 위한 영국 JISC의 프로젝트 명이다. 프로젝트는 영국 학자에 의한 연구 논문의 오픈 아카이브와 관련된 모든 지적 재산권 (IPR) 문제를 고려하는 임무를 띤다. SHERPA/RoMEO는 전 세계의 저널과 출판사에 대한 정보, 저작권정보등을 제공하고 있다.

것인지 하는 문제이다. 현재 국가와 민간 디비업체가 학술지식을 분할해서 관리, 지배하고 있지만 그 역할 분담이 모호하거나 각각의 역할이 중첩, 중복된 데 반해 학술 지식의 개방 속도는 더딘 편이다. 최근 “공공기금 들어간 학술논문 누구나 자유롭게 이용해야”<sup>24)</sup> 한다는 논의가 가속화되면서 “공공기금을 바탕으로 연구한 학술논문을 누구나 쉽게 열람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법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말해지지만, 또 이런 방식으로 OA를 실천하는 국가가 있는 것도 사실이지만 OA를 이렇게만 이해하게 되면 학술지식의 공공성을 오독한 우려가 있다. 학술지식의 공공성이 ‘공공기금’ 때문에 발생하는 것으로 생각하게 되면, 지식의 공공적 가치는 국가가 지불한 학술지식의 판매 대금 정도의 시장 가치로 전락하기 때문이다. 즉 국가가 논문을 생산하는 데 일조했기 때문에 논문의 지적재산권이 국가에게 있다고 주장하는 논리가 일반화되면, 연구 지원의 의미가 경제적 가치로 전환되면서 학술 지식의 공공성 기반이 약해진다. 공공기금을 받은 연구의 OA 출판은 마땅한 거래일 수 있지만 엄밀히 말해 절반의 공공적 가치이다.

앞서 설명하고 있는 것처럼, 학술지식은 ‘누적성’, ‘공유성’, ‘공개성’의 특징을 갖는다.<sup>25)</sup> 학술논문은 다른 저작에 비해 계승-비판-발견의 지속적 시간성 속에서 쓰여지는 것으로서 동료평가와 심사를 통해 학문 장에서 공개, 공유되는 공통의 자원이다. ‘커먼즈로서의 학술 지식’의 특성이다. 이를 위해, 학술 지식을 OA 제도로 개방시켜내는 것은 공공적 가치의 진작을 위해 다급하고 시급한 일이 되었다. OA 제도는 학술지식을 법적, 기술적 장벽 없이 사용자에게 무료로 개방하는 제도이다.<sup>26)</sup> 이는 기술적, 사회적, 학문적으로 데이터 자원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의 문제이다. 실제로 대안모델 구축 시도가 여러 방향에서 진행되고 있다. “대안모델의 구체적인 구축 노력은 개방접근 학술논문 저장소(open access repositories)와 개방접근 저널(open access journals) 모델”<sup>27)</sup> 등이 있다. 이를 참조해서 우리 현실에 필요한 것을 시도해야 한다.

이 제도를 현실화하는 과정에서 국가와 공공영역이 해야 하는 것은 기술적, 경제적, 법률적 지원이다. 우선 기술적 지원이 필요하다. 국가와 공공 영역이 주목해야 할 것은 데이터이기도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네트워크이다. 오픈 액세스 논문을 확보하는 것은 각각의 기관별, 학회 별로 관리, 집적하고 공공영역은 이를 연결하는 네트워크 플랫폼 지원에 집중해야 한다. RISS가 검색 과정에서 민간디비에서 다시 인증받는 과정을 생략하고 소속기관 인증으로 디비를 연결시키는 것은 고무적이다. 향후 공공 영역에서 집중해야 하는 것은 국가전자도서관이나 RISS의 역할처럼 각 기관을 상호 연결하는 역능을 키우는 일이다. 또, 공공과 민간 데이터를

24) 「공공기금 들어간 학술논문 누구나 자유롭게 이용해야」, KBS 뉴스, 2019.9.20.

25) 김성태, 「학문논문과 저작권」, 『지식의 공공성 딜레마』, 2015.7.

26) 「공공기금으로 생산된 학술논문 무료 개방 위한 법개정 시급」, <파이낸셜 뉴스>, 2019. 9.20 “미국은 2009년 공중보건 및 복지에 관한 법률을 통하여 국립보건원 기금이 지원된 논문의 경우, 최종 동료심사 원고를 국립의학도서관에 제출해 논문 공식출판 후 12개월 이내에 공중이 이용할 수 있도록 요구하고 있다. 독일은 2013년 저작권법을 개정해 논문 저작자의 논문 공개 권한을 확대했다. 논문 최초 출판 후 12개월이 경과하면 출판사와 배타적 계약(독점 계약)을 맺었다더라도 비영리 목적으로 해당 논문을 공중에 제공할 권리를 논문 저작자에게 부여하고 있다. 한편, 유럽 국가연구기금기관 협의체는 2018년 Plan S라는 강제 규정을 수립하여 2021년 1월부터 공공기금을 지원받아 생산한 모든 학술 출판물은 오픈 액세스 저널과 플랫폼을 통해 즉시 출판하도록 의무화했다. 현재 Plan S에는 유럽의 16개 연구기금기관과 4개 민간재단이 참여하고 있다.”

27) 이수상, 「디지털 도서관의 개방 접근에 관한 연구」, 『한국도서관 정보학회지』 34(3), 2003. 이 논문에서는 OA 저널을 구축하거나 지원하는 조직 및 단체의 외국 사례를 다루고 있다.

연결하고 학문분야별 OA 플랫폼 사업을 경제적 기술적으로 지원하면서 시민의 접근성을 높이는 종합적인 방안이 필요하다. 이 과정에서 가시화되어야 하는 것은 협력과 개방의 네트워크를 촉발시켜 내는 학술지식 디지털 자원의 거버넌스 구성과 정보의 부적절한 유출을 모니터링할 수 있는 기술적 지원이다. 학회연합 플랫폼의 관리도 역시 필요하며, 이를 각 공공기관과 연결하는 네트워킹도 중요하다.

또 경제적 지원으로는 OA 전환 학술지의 출판 편집 비용 보전이나 플랫폼 운영비 등의 사회적 자본을 만들어내는 것, 그리고 학회 운영의 민주화와 개방성을 도모하기 위해 학회의 상호 협동의 과정을 지원하는 방식 등이다. 앞서 언급했지만, 국가 지원은 줄세우기 방식을 통한 선별이 아니라 가치 모델에 따른 지원이 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학술지 평가의 관점 전환이 필요하다. 학술지 간의 배타적 경쟁을 통한 줄 세우기 평가를 지양하고, 공공적 가치 증진을 위한 관점으로 전환해야 한다. 학술지식이 가진 공공적 가치 역시 평가의 관점이 아니라 ‘지원’의 관점에서 보강해야 한다.

아울러 OA 출판 학술지에 지원해야 한다. 기존의 평가 제도가 학술지를 제도화하면서 일정한 기준을 제시하고 이를 선별하는 방식이었다면, 향후 필요한 것은 연구자의 자발적 협동을 촉발시켜 내는 지원이다. 이를 위해 학술지 지원에서 OA 출판 학술지 출판 지원을 선택적 지원이 아닌 전면적 지원으로 전환하는 것도 생각해 보아야 한다. 아울러 공공의 영역들 안에서 변화가 필요하다. 이를테면 OA 과정에서 “대학도서관이 프리라이더가 되어서는 오픈 액세스에 성공할 수 없”<sup>28)</sup>기 때문에 대학도서관의 역할과 위치가 중요하다. OA 학술지 발간을 위해 대학도서관의 학술지 구독료를 학술지 발간 지원으로 전환하는 것도 필요한 일이다.<sup>29)</sup>

법률적 지원책으로는 OA 제도 과정에서 빚어지는 법률적 문제를 지원하는 것이다. 최근 공공기금 논문의 오픈 액세스 추진은 법률적 근거를 마련하고 있다. 이는 지적재산권의 전송, 배포 권리를 양도하는 과정에서 학회-민간디비 간의 계약 내용을 조율할 수 있어야 하며, 차후 저작권 분쟁을 미연에 막을 수 있는 지원이다. “해외에서는 출판사(학회)의 저작권 및 셀프 아카이빙 정책을 통합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저자 등이 출판사(학회)의 셀프 아카이빙 정책을 쉽게 검색하여 적용”<sup>30)</sup>할 수 있는데 반해 국내 학회의 경우에는 저작권의 개념이 미약할 뿐만 아니라 OA 제도를 가능하게 하는 셀프 아카이빙 계약사항 자체에 대한 논의가 전혀 안 되고 있는 난점이 있다. 실제로 “2019년부터 학술지 저작권 정책 명문화와 공개를 더욱 확대하고자 한국연구재단에서 운영하는 ”학술지 평가제도“의 신청자격에 ”학술지 저작권 안내 시스템 저작권 정책 공개“ 항목을 공지하고 있는데, 앞서 보았던 것처럼 저작권 계약서 조항에 근거해서 ‘셀프 아카이빙’을 할 수 있는지 없는지 판단하기 어려운 게 사실이다. OA 제도를 교육하고 안내하면서 법률적 분쟁을 미연에 막을 수 있는 학술 지식 저작권 분쟁

28) 정경희, <8.29 지식공유연대 토론문> 참조, 또, <OA 출판에서 도서관의 역할>과 관련해서는 <https://www.rsc.org/globalassets/14-campaigns/m/lc/lc16013/lc16013-open-access-survey-report-librarians.pdf>을 참조할 수 있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OA 출판에 대해 알고 있는가’라는 물음에 ‘예’의 답변이 95%를 차지하며, 이들 대개가 ‘도서관’을 통해 이 제도를 알게 되었다고 말하고 있다.

29) 오스트롬은 『지식의 공유』에서 ‘연구 결과의 OA화를 위한 저자 지원’에서 도서관 사서의 역할을 구체적으로 제시한다. 연구비 지원에서부터 OA 문서저장소 탑재까지 연구 결과 확산에 있어 도서관 사서의 역할이 중요하다.(엘리너 오스트롬, 샬럿 헤스, 『새로운 지식 공유 자원의 구축』, 『지식의 공유』, 김민주역, 탐임북스, 2010. p.331)

30) 김규환, 「국내 학술지 논문의 self-archiving을 위한 저작권 및 아카이빙 정책 관리시스템 사례 연구」, 한국도서관정보학회 하계 학술발표회, 2013.05.

의 가이드라인을 학회가 가지고 있어야 하며, 이를 위해서 ”저자들을 대상으로 OA 계몽 운동 “31) 등이 필요할 수도 있다.

#### 4. OA 출판으로 전환하는 학술지의 실제

OA 출판을 선언하는 이유는 “학술연구 성과에 대한 자유로운 접근 보장, 연구·학문·지식의 발전, 연구 성과의 신속한 확산” 때문이다. 이를 위해서 도서관계와 학술진흥 공공기관의 지원이 필수적이다.<sup>32)</sup>

실제 대중서사학회가 OA 출판으로 전환한다고 가정할 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정리해보면, 일단, 저작권 및 이용허락 정책을 연구자와 학회가 정리하고 약속하는 것이 선결되어야 한다. 앞서 설명한 것처럼, 라이선스는 CC-BY NC ND(Noncommercial, Nonderivative)로 약속하고, 원저작자인 연구자의 권리를 구체적으로 명기, 인식시키는 노력이 필요하다. 둘째, OA 전환 과정에서 논문 서비스 영역이 축소되는 것을 해결하기 위해 공공영역과 민간디비 영역에 모두 공개해서 논문서비스의 손실을 최소화 해야 한다. 아울러 민간디비 업체와는 저작권료를 받지 않는 대신 ‘비배타적 이용허락 계약’을 체결해서 서비스 영역을 확대해 가야 할 것이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학문별 학회연합 플랫폼 개발이 이루어진다면 OA 출판을 통해 학술지식 장의 활력이 배가될 것이다. 지식공유연대는 지난 9월 회의에서 학문별 학회연합 플랫폼을 구상하면서, ‘시민과 함께 하는 연구자의 집’ 기획으로 다음과 같은 플랫폼을 상상해 보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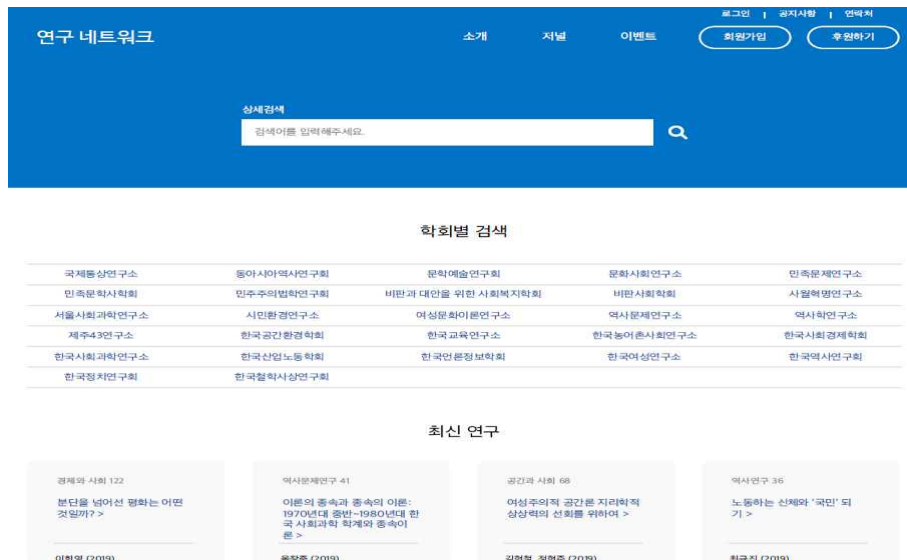


그림 2 <학문별 학회 연합 플랫폼 기획안>

이 플랫폼은 개별 학회의 홈페이지 기능을 통합하는 것은 물론 논문 검색과 열람을 동시에 가능하게 하는 플랫폼이다. 일차적인 목적은 홈페이지를 통합함으로써 OA 논문의 검색, 열람

31) 엘리너 오스트롬, 살렛 헤스, 앞의책, p.326.

32) 정경희, 「문헌정보학 분야 학술지의 오픈액세스 출판 전환 사례, 『지식공유연대 심포 자료집』

기능을 개선할 수 있는 것이다. 학문별 인접 학회가 동시에 통합적으로 운영된다면 논문 검색의 유효한 사이트로 자리잡을 수 있을 것이다. 또 이를 다른 공공기관과 연결하는 네트워킹 서비스도 필요하다. 이는 공공기관의 협력을 통해 이루어져야 한다. 마지막으로, OA 출판 전환을 위해서는 출판 비용의 지원이 필요하다. 한국연구재단이나 공공 도서관이 OA 공유 자원을 유지하고 보전하려는 노력이 전면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지식공유연대가 상상하는 "OA 출판 전환 선언"은 '새로운 학문 생산체제'를 위해 '지식의 공공성'을 만들어가는 노력이다. 현재 우리 사회에 필요한 것은 학술지식의 개방적이고 민주적인 정보 접근이다. 지속가능하고 건강한 학술생태계를 위해서, 그리고 질 높은 지식을 편리하게 접근하고자 하는 시민을 위해서, 공공성의 패러다임 전환이 시급하다. 학술지식이 사회적 협동을 통해 생산되는 것 뿐만 아니라 이 공유자원의 몫을 시민사회에 민주적으로 분배하는 과정은 공공영역(public)과 지식커먼즈(common) 간의 협력적 관계를 통해서만 가능해질 것이다.

<부록>

### 새로운 학문 생산 체제와 '지식 공유'를 위한 학술 단체 및 연구자 연대 선언

우리 인문·사회과학 연구자들은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학술 연구 활동을 통해 삶과 사회에 이바지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학술성과의 유통에 관한 공공기관과 민간업체의 정책을 개선하고, 학회 및 학술지 운영에 관련된 연구자 문화를 성찰하여 스스로 바꾸기 위해 모였습니다. 우리는 학술 연구 활동을 공공적인 것으로 만들어 모든 사람들의 삶에 보탬이 되고, 경쟁과 성과주의에 물든 사회를 바꾸는 데 기여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선언합니다.

첫째, 지식 생산 및 활용의 공공적 가치 증진을 위하여

- 1) 연구자들의 논문 집필·연구 활동뿐 아니라 학술지 편집, 논문 심사, 학회기획 등의 모든 활동에 대한 정당한 평가가 필요합니다. 현재 인문·사회과학 학회가 학술정보 업체들과 맺고 있는 계약관계는 재고되고 다시 구조화되어야 합니다.
- 2) 한국연구재단의 한국학술지인용색인(KCI)의 전자 논문 제공 방법은 확고한 지식 공유(오픈 액세스 등) 정신에 입각하여 개편되어야 하며, 지식 생산자인 연구자들이 주체가 되어 운영하고 시민들 누구나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바뀌어야 합니다.
- 3) 도서관들도 오픈액세스 학술지 발간과 이용을 지원할 수 있는 체제를 갖추어야 하며, 대학들의 오픈액세스 학술지 발간에 대한 정부 및 학술진흥 공공기관의 지원이 필요합니다.

둘째, 학문과 지식 생산의 공공성·합리성을 위하여

- 1) 한국연구재단의 학회 및 학술지 평가 제도의 개혁이 필요하며, 대학 또한 논문 편수로 연구자와 대학 교육자의 모든 것을 평가하는 잘못된 제도를 이제는 버려야 합니다. 이를 위해

질적 평가제도의 확충은 물론, 연구자의 다양한 사회적 기여에 대해서도 적절히 평가하는 제도를 만들어야 합니다.

2) 우리 인문·사회과학 연구자들도 스스로 의식과 문화를 개선·개혁해야 합니다. 논문 양산 체제에 모래알처럼 된 연구자들이 굴종하고 학회들이 그 경쟁 단위가 되고 만 현실은 바뀌어야 합니다. 학회들의 협동과 공동의 운영이 필요합니다.

3) 학회가 더 이상 경쟁과 착취의 방식으로 운영되어서는 안 됩니다. 학술 활동을 빌미로 한 대학원생의 그림자 노동과 비정규직 교수들에 대한 차별은 사라져야 하며, 학벌·학연 등에 의한 학회 운영과 학교 이기주의도 폐기처분되어야 합니다.

오늘 우리 인문·사회과학 연구자들은 더 개방적이고 엄정한 학술 평가 제도와 우수하고 공공적 학술성과를 만들고 유통하기 위해 노력할 것임을 다짐합니다. 이를 위해 연구자들의 협동과 지식공유를 위한 인문·사회과학 학회 및 연구자들의 모임을 결성하고, 다른 분야의 연구자들과도 연대 활동을 모색해 나갈 것을 선언합니다.

2019년 8월 29일

새로운 학문 생산 체제와 지식 공유를 위한 학술단체와 연구자 연대  
구결학회, 구보학회, 국공립대학도서관협의회, 국제한국문학문화학회, 근역한문학회, 대중서사학회, 대한출판문화협회 출판정책연구소, 민족문학사학회, 민주평등사회를 위한 전국 교수연구자협의회, 상허학회, 순천향대학교 인문학연구소, 시민과 함께하는 연구자의 집, 인문학협동조합, 제주대 공동자원과 지속가능사회 연구센터, 한국고소설학회, 한국고전문학회, 한국공간환경학회, 한국극예술학회, 한국한국기록관리학회, 한국기록학회, 한국도서관·정보학회, 한국문학치료학회, 한국문헌정보학회, 한국비블리아학회, 한국사고와표현학회, 한국서지학회, 한국시가학회, 한국시학회, 한국여성문학학회, 한국정보관리학회, 한국철학사상연구회, 한국한문학회